

2020년 업무보고

확실한 변화, 대한민국 2020

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

2020. 2. 27.



행 정 안 전 부
경찰청 · 소방청



목 차

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| 1 |
| II.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| 3 |
| III. 주요업무 추진계획 | 5 |
| 1. 2020년 핵심 추진과제 | |
| 2. 쟁점(갈등) 과제 | |
| IV. 2020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뀔니다 | 21 |

I.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

1 선제적 재난 대응과 사고·범죄예방으로 국민의 평온한 삶 확보

- 국가 재난대응체계 신속 가동으로 동해안 산불·자연재난 피해 최소화
 - 강원 산불(19.4.4.) 발생 초기 중대본 신속 가동 및 범정부 총력대응*, 여름철 최다 태풍(7개) 내습 등 극한 조건에도 선제적인 대비
 - * 소방관 3,251명·소방차 872대 조기 투입으로 양양산불(05.4월) 대비 진화시간 19시간 단축
- 생활 밀접시설 중심의 국가안전대진단*으로 안전 사각지대 정비 및 불법 주·정차 관행 근절 추진, 공익신고 활성화** 등 안전문화 확산
 - * (19년) 지자체별 평가 및 점검결과 공개 확대(18년 77.3% → 92.1%) / ** 주민신고제 도입 등
-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완수(20.4월 전면시행)로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
 - 국립 소방연구원 개원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(25%p ↑) 등 안전투자 지속 확대
-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, 안전속도 5030 등 사람중심 교통정책으로 도로 위 안전 확보, 성폭력·마약 등 생활주변 악성범죄 엄단으로 체감안전 향상
 - ※ 교통사고 사망자 11.3%↓(음주운전 사망은 29.0%↓), 경찰청 조사 체감안전도 역대 최고(74.7점)

2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함께 잘사는 지역의 초석 마련

- 주민중심 자치분권 국가 구현을 위한 관계법령 제·개정 추진
 - 「지방이양일괄법」 제정(21.1.1. 시행),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(19.7.1.)과 지자체 조직·인사 운영상 자율성 강화로 지방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
- 1단계 재정분권의 완성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
 - 지방소비세 6%p 추가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(8.5조원),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 일반사업 전환*, 지역 간 균형장치** 마련 등 성과 창출
 - * 39개 국고보조사업(3.6조원) 전환 ** 소비세 배분 시 지역기중치 적용, 상생기금 출연기한 연장

- 역대 최대규모의 지방추경예산 편성(52.2조원), 중앙·지방이 함께하는 일지리사업(7.8만명) 전개, 지역사랑상품권 발행(23조원)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
-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혁신 기반과 사업 확대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| 국민이 소통·숙의하는 혁신거점 공간 조성 |
| 주민주도 커뮤니티 활동 공간 조성 | 유휴 저활용 공간을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 |
|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| 국민 아이디어 활용, 지역사회 소규모 문제 해결 선도 |

3 정부혁신의 기반 마련 및 속도감 있는 확산

- 사회적 가치·참여 중심의 정부혁신 추진으로 혁신 성과 가시화
 - 안전·환경 정책 등의 공공성을 강화*하고,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 및 신뢰 회복**을 위한 기반 마련
 - * (안전) 어린이·노인 대상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, (환경) 종이컵·비닐 등 사용 저감
 - ** OECD 정부신뢰도 순위 상승('17년 32위 → '19년 22위, 10단계 ↑)
-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라, 기존 전자정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디지털 정부혁신 방향성 정립
 -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('20.8월 시행), 공공데이터 개방*으로 데이터 경제 기반 마련
 - * OECD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 3회 연속 1위 달성('15, '17, '19년)
-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*, 취약계층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확산 등 선제적·통합적 서비스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
 - '행안부 작지만 체감도 높은 과제' 선정·추진으로 포용성 강화
 - * 임신·출산진료비, 엽산·철분제 지원, 출산 전후 휴가급여지원, KTX 특실 할인 등
-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 및 기존인력의 신규분야로의 재배치로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



II.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

업무추진 여건

- **(국민안전)** 재난대응 역량은 증가하였지만, 예측 불가능성 증대* 및 신종재난(미세먼지·ASF 등) 발생 등은 꾸준한 대응체계 혁신 요구
 - * '19년 여름철 태풍·호우특보 609회(최근 5년 평균 342회 대비 78% 증가)
-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재난·사고의 주된 원인*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예방 중심 사회로 도약할 필요
 - * 안전수칙·규정 위반, 점검·감독 부실, 안전기준 사각지대, 안전무시 관행 등
- 특히,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및 기대 고조*
 - * 통학버스 사망사고('19.5) 및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사망사고('19.9) 등으로 국민 우려 증대
- **(지역활력)** 획기적 자치·재정분권을 위한 핵심과제 이행으로 분권국가 토대는 마련했으나, 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의 저활력 상태 계속
 - 청년인구 유출과 저출산('18년 합계출산율 0.98)에 따른 지방소멸 가속화*, 제조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**로 지역 활력 저하
 - * 향후 30년 내 226개 시·군·구 중 42%(97개)가 소멸 위기(고용정보원, '19년)
 - ** ('17년 시·도별 경제성장률) 서울 2.3%, 경기 6.6% vs. 경북 △1.2%, 울산 △0.7%
 - 자치·재정분권의 추진 성과가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 지역활력 대책 마련 필요
- **(정부혁신)** 혁신성과의 본격 창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낼 시기로, 참여와 협력의 질적 제고 및 공공서비스 혁신에 경주
 -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의 모습 구현과 참여 수단의 실질화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혁신성과 창출 필요
 - 그간 기관·사업마다 분절적으로 제공*된 공공서비스를 국민 중심으로 연계·통합하여 선제적·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
 - * 국민 74.3%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함('18년 사회서비스조사)

목표

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

추진전략
·
중점과제



이행기반

국민의 요구

적극행정

중앙·지방 협치

혁신성과

핵심가치

혁신

포용

안전

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

1 2020년 핵심 추진과제

① 한발 앞선 예방으로 만드는 안전사회

◇ 재난·사고 유형별 맞춤형 투자를 늘리고, 국민과 함께 일상 속 위험을 정비하여 '먼저 생각하고 예방하는' 안전사회로 전진

(1) 국민안전을 위한 선제적·적극적인 투자

□ 재난·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지속 확대

○ 신종·복합재난, 인명피해 다발 사고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분야*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산**을 지속 확대하여 국민 일상의 위험 제거

-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를 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, 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공시제도 도입 등 안전에 대한 지방 투자 촉진

* 지하시설물 통합지도 구축, 건설 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, 감염병·가축질병 방역 지원 등

** 재난안전예산 : ('19년) 15.9조 → ('20년) 17.5조 / '24년까지 21조로 확대

○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* 확대로 생활권 도로 內 안전 제고

-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·신호등 확충 및 제한속도 하향(30km/h) 등으로 '22년까지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제로화



* ('19년) 보호구역 개선, 회전교차로 등 569억 원 → ('20년) 1,767억 원(약 3.1배)

- 안전속도 5030(도심부 제한속도 하향), 교통약자를 위한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 환경 정비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달성('22년, 2천명↓)

○ 재해예방사업(저수지·급경사지 등 5개 분야, 5,075억 원) 중점 투자·관리

- 시설물 단위의 단편적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마을 공동체 단위를 정비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*으로 투자 효율성 제고

* 지방하천·하수도·소규모 공공시설 등 통합 정비('19년 27억 원 → '20년 313억 원)

※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효과 분석 결과, 1,000원 투자로 4,000원의 편익 발생

□ 신기술을 통한 피해 예방 및 상황관리능력 제고

- 경찰·소방·자치단체 등 현장 유관기관이 공동 사용(멀티미디어 활용)하는 PS-LTE 방식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* 구축('20년)
* 음성·영상이 가능한 4G 통신망으로, 모바일 앱·영상공유 등 응용서비스 제공
- GIS 기반 통합 상황관리시스템* 구축('20.6월)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, 관련 기관 간 유기적 상황관리 및 재난대응
* 기상 및 지리 정보가 포함된 통합상황판을 통해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 및 통합지휘
-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('20년), 차세대 112시스템* 구축 등 대응역량 강화
* 현장 경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 지원 및 범죄예측 역량 강화

□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투자 기반조성

-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* 및 우수 재난안전 제품·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시장 진출 지원
*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 제정,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('21년 시범사업) 추진, 「제2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」 개최, 소방시설의 검·인증기준 향상 추진 등
- 중앙 - 지방 간 재난안전 R&D 협력체계 강화 및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*로 재난안전 R&D 주도적 역할 강화
* 국민·자치단체 수요에 기반 ⇨ 빅데이터·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재난 예측·예방기술 개발
국가 재난안전 R&D : ('18년) 8,988억 → ('20년) 1조 3,020억 → ('22년) 1조 5,134억

[2] 예방 중심의 풀뿌리 안전문화 확산

□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 발굴 및 해소

- 국민·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진단대상 선정* 및 자치단체 평가 확대(시·도→시·군·구) 등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 제고
* 대국민 설문조사,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 관심 분야 및 위험시설 중심 선정
- 사전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*하여 점검 효과 극대화
* (1단계)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분야(비상구·대피경로 물건 적치 등)부터 우선 추진
→ (2단계) 법적근거·인력·예산 등 기반 확보 후 단계적 확대
-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 밀접시설 중심으로 안전정보(점검결과 등)의 대국민 공개* 및 지도 기반 인터넷 서비스 제공
* 학교, 어린이집·유치원, 체육시설 등 14개 분야 우선 공개('20년)

□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

-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(281개소) 폐지 및 '불법 주·정차' 주민신고제 대상을 4대 구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추가



- 기능이 유사한 '생활불편신고'와 '안전신문고' 앱 통합 및 기능 고도화(자동신고분류, 챗봇 상담 도입 등)를 통하여 신고 편의 증진
- 안전의무 위반*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수칙 준수 유도
 - *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행위(음주운전 등), 적발 빈도가 증가하는 행위(선박 과적·정원초과) 등

□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교육·훈련 확대 및 안전문화 확산

- 종합안전 체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안전체험관 지속 확충* 및 국민 안전교육 전문인력·교육기관** 육성
 - * '21년까지 7개소 건립 지원,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'21년 이후 추가 확충계획 마련
 - ** 전문 교육인력 1만명 육성 및 전문교육기관 100개 지정(~'22년)
- 재난대응 훈련의 시의성·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기·유형별 재난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참여형 '안전한국 훈련' 실시(연 1회)
 - * 최근 빈발한 재난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된 훈련 실시 등 실효성 강화

(3)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

□ 재난 유형별 효과적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정비

- 범정부 통합 대응이 필요한 재난(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격상 시)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 공동차장제*(행안부-주관부처 장관) 도입
 - * (행안부) 국가 자원과 기능의 협조·연계 및 지자체 대응 지원 총괄 (주관부처) 분야별 전문성(감염병-복지부, 방사능-원안위 등)에 기반하여 대응·수습
-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지역 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과 재난 초기, 국가단위 총력대응* 체계 구축으로 현장 작동성 제고
 - '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과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추진
 - * 관할중심의 현장대응 → 근거리기준 공동대응, 최고수준 대응 후 단계적 하향 조치

- 감염병 등 신종재난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*을 통하여 기관 간 명확한 역할 정립 및 협력 대응체계 강화

* 감염병 우려자 임시생활시설 사전 지정으로 비상 시 신속 활용 및 혼선 최소화, 자가격리자 지정 기준 및 관리 지침 명확화(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개발·활용) 등

【참고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지원대책 추진상황

- **(협력체계 강화)**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운영 등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책기구 구성·운영 및 유관기관* 방역활동 지원
 - *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총리, 복지·행안부장관), 중앙사고수습본부(복지부), 중앙방역대책본부(질본), 지자체 등
- **(특별관리지역 지원)** 대구·경북(청도)에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*을 파견하여 방역 현장의 애로사항 실시간 파악 및 협의·조정으로 신속히 해결
 - * (대구) 12개 기관(4개 반) 33명 / (경북) 7개 기관(4개 반) 23명
- **(지자체 행·재정 지원)** 재난안전특교세(743.5억원)를 통한 방역활동 지원,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인력지원 지침 시행,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* 추진 등
 - * 지자체 예비비·재난관리기금 활용,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할인율 상향, 지방세제·금융지원 등
- **(기타)** 자가격리자 관리 총괄, 우한 귀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(~2.27.), 정부·자치단체 행사 운영지침 마련·시행,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

□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재난대응역량 제고

-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, 수습지원단 구성·운영 등 유관기관 협업을 기반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* 추진
 - * 정확한 현장상황 브리핑, 피해자 애로·건의사항 확인 및 조치, 의료 지원 등
- 재난대응 분야 위치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중앙대책본부와 통신사업자(SKT, KT, LGU+) 간 피해자 위치정보 공유체계* 구축
 - * 재난 피해자 발생여부 예측, 피해자 및 실종자 파악, 주민대피 활용 등 사용범위 구체화
- ‘중앙사회재난정책협의회’ 및 ‘재난 유형별 민·관 협의체’(‘19년 15개 → ‘20년 18개)를 통한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협업체계 공고화*
 - * 빈발 재난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,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응훈련 실시 등

□ 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

- 지역의 위험요인을 자치단체가 직접 발굴하여 예방계획 수립 및 집중 관리하는 ‘지역단위 위험성* 분석’ 제도 도입
 - * 예) 시설물 노후도·위험도, 화재·위험물 등 안전기준 위반사항 등

- 재난 피해자 대상 **재난심리회복 지원***, **임시조립주택 지원**** 등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자치단체 행·재정 지원 강화
* 중앙· 시도 심리회복지원단 구성·운영 / ** 설치 소요 기간 단축(60→30일)
- 자치단체 **재난관리 전담인력**(방재안전직 등) **보강** 등을 통해 지역의 재난관리 전문성 및 상황관리능력 강화

□ 포괄안보 환경에 적합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

- 안보위협·재난 등 복합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**비상대비계획 개선** 및 위기대응 시나리오에 기반한 **‘을지태극연습’*** 실시
*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, 주제별 토의·강평 등 훈련 실효성 제고
- **다중이용시설 경보 전파**를 위한 전용단말 보급 등 **경보체계 고도화**

[4]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

□ 시민 참여·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고도화

- 주민 참여형 치안협의체 등 범죄예방을 위한 **지역사회 공동노력*** 강화
* 원룸촌 등 범죄취약요소 진단, CPTED(범죄예방환경설계) 확산, 자율방범대 협업 강화 등
- 탄력순찰 목표관리제, 주민접촉 순찰제 등 주민친화적 순찰을 시행하고, 기관 협업을 통한 **예측적 범죄분석 시스템*** 도입
*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개발한 빅데이터 범죄예측 모델을 순찰線 지정 등에 활용

□ 사회적 약자 보호 내실화로 치안 사각지대 해소

- 가정 폭력 대응모델 고도화, 불법촬영 범죄 대응 강화 등 **對여성 범죄** 대응력을 향상하고, **아동·노인·청소년 보호활동*** 강화
* 학대우려아동 상시 합동점검,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(1만대),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선도 등
- **범죄 피해자 보호***를 강화하고, 가·피해자 간 대화를 통해 피해의 근본적 회복을 도모하는 **‘회복적 경찰활동’** 전국 확대(120개서)
* 성폭력 피해자 AI조사 도입, 2차 피해 예방지침 수립, 신변보호 시스템 강화 등
- **국민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불법·범죄 엄단**
 - 사기(보이스피싱), 마약, 아동성착취물 등 **신종 범죄 근절대책** 마련
 - **일상생활 속 반칙과 편법 집중 단속**, 범죄수익 추적·동결과 미제 사건 추가 수사 등으로 신뢰받는 경찰 모습 구현

② 분권과 혁신을 통한 지역의 활력 제고

◇ 지방자치를 통해 축적된 지방의 경험·자산과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혁신으로 활력 있는 지역 구현

(1) 주민·공동체가 주도하는 혁신적 지방자치

□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을 위한 주민참여의 보장

- 풀뿌리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 확산* 및 활성화**, 참여예산·도시재생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 연계를 통해 읍·면·동 혁신플랫폼으로 고도화

* ('17.5월) 47개 → ('18년) 95개 → ('19년) 408개 → ('20년) 600개

** 청년·외국인 등 사회적약자 참여 확대, 공가(公暇)·온라인주민자치활동 활성화 등

- 주민직접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·소환·발안제도* 개선

* 주민투표 대상 확대,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, 주민조례안 의회 직접제출 등

- 생활형 지역과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방식 확산으로 주민의 아이디어와 전문성·현장성을 활용하는 참여구조 마련

* 지역혁신포럼('19년 6곳 → '20년 8곳),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('19년 4곳 → '20년 5곳),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('19년 10곳 → '20년 36곳)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활동 지원

□ 현장과 성과 중심의 규제혁신

- 규제개선 쏠 과정에 주민과 기업의 직접 참여를 대폭 확대*함으로써, 국민의 규제혁신 이해도 및 체감도 향상

* 참여범위: ('19년) 민생규제 → ('20년) 민생규제+지역에서 건의한 모든 규제

- 수시발굴-상시개선 체계로 전환하여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높이고, 규제개선 결과가 지역현장에 실제 적용되도록 규제혁신 사후관리 강화

□ 청년을 통한 지역의 창의성 발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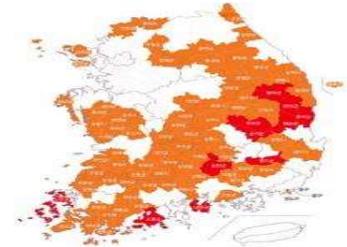
- 지역여건에 따라 자치단체가 기획·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실업해소와 지역정착 지원('20년, 2.6만명)

- 청년 활동공간 조성을 통한 **도시청년의 소멸위기지역 정착 유도**
* 지역 내 빈집·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**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** 시범실시
-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력의 마중물로서 **마을기업 육성*** 추진
* 지역특화형·모두앳마을기업 육성, 판로·경영 지원 및 위기마을기업 회생·재도약 지원

[2]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

<인구감소위기지역>

□ 인구감소 위기지역 집중 지원



- 인구감소에 대응한 **소규모 지역단위 공공·생활서비스 체계 개편**
 - 읍·면·동 일선행정기관 기능 재설계*, 주민시설·기관의 공동설치·운영 확대 및 거점-주변지역 간 순환·연결(Network) 체계 구축 추진
* 광역단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본청 이관, 읍·면의 이동식 행정서비스 확대
- 행안부 공모사업 추진 시, 인구 상황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, 사업량을 우선 할당*하는 **공모사업 할당제(quota)** 도입·확산 추진
* 인구구조,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후 사업일정 비율을 배정
- 인구감소지역의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* 및 **맞춤형 지원사업** 실시
*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의, 재정지원근거, 종합대책 수립 의무 규정

□ 섬·접경지역 등 저성장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

- 전국 어디에서든 국가 최소기준(National Minimum) 이상의 생활 서비스를 위한 **낙후지역 기반시설 공급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확대**
* 접경지역 LPG배관망 구축, 민·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(7개소) 등
- **섬·접경지역 특화 관광개발***과 **교통망 확충****으로 **지속가능 발전방안** 마련
* 제2회 섬의 날 행사 개최(8.7.~8.9. 통영), DMZ 內 평화의길 조성 및 국제 자전거 대회 개최 등
** 동서녹색 평화도로(강화~고성)와 영종~신도 평화도로 건설, 연도교 건설(당진 난지도 등)
- **군사적 특수상황**에 따른 피해·소외지역* 지원
*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, 서해5도 생활환경 개선사업,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등

□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

-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한 **나눔·봉사문화 확산**
 - 지역사회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**안녕 캠페인*** 확대
 - * 이웃의 안부·안전 확인 등 지역사회 필요과제 중심으로 1지역 1안녕 프로젝트 추진
- 못 다한 **과거사*** 진실규명의 **완결적 처리**와 **미래지향적 후속조치**로 **과거와 미래의 포용적 통합 추진**
 - **민주인권기념관과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**** 조성(광주·제주)
 - *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(여순사건 포함), 선감학원사건, 형제복지원사건 등
 - **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·신체적 트라우마 전문치유서비스 지원사업 개시('20년~)
-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**유해봉환 확대***와 제주 4·3사건 등 미해결 과거사 정리 및 **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사회통합 지원**
 - 타라와 유해 봉환 및 사할린 유해봉환 관련 한·러 협정 체결 추진, 제주 4·3 희생자·유족 심사 및 결정(~'20.6.)
 - * (범위) 일본·사할린 → 태평양 격전지(타라와), 중국(해남도) 등 / (방식) 정부 → 정부+민간
- **탈북민·외국인주민** 등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 인식개선, 생활인프라 확충 및 **교류·참여 활성화***
 - * 전국 릴레이 캠페인인 **지역사회 동행 프로젝트** 실시, 탈북민 소통·교류공간 확충 등 이북5도 위원회 및 이북도민 명예 시장·군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적응 지원

[3] 다양성과 창의성이 만개하는 자치·재정분권 구현

□ 주민주권 구현과 실질적 자치권의 확대

- 주민자치 원리 명시, 주민참여제도 개선과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**자치분권 관계법령의 조속한 입법으로 자치분권 가속화**
 - 단체장 중심의 획일적 기관구성에서 탈피, 지역맞춤형 자치분권을 위한 **지자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*** 모델 설계 및 법률 제정 추진
 - * (현재) 단체장-의회 단일형 → (개선) ①책임행정관(전문가)형 ②위원회형 ③약(弱)단체장형 등

-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혁신, 교육 자치와의 협력 강화 등 지방자치 청사진 제시를 위한 「자치분권 미래비전 2030」 수립 추진
-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**지방이양 확대***, 기관 위임사무의 **집행 자율화****와 **조직운영 자율성 확대**로 지방의 **실질적 자치권 확대**
 - * 1차 이양사무('21. 1. 1. 시행)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이양사무 추가 발굴
 - **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·가이드라인 등 **그림자 규제 완화** 및 사후 책임성 강화
-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생활안전·교통·지역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**광역단위 자치경찰제*** 도입
 - * 「경찰법」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제·개정 후, **5개+α 지역**(서울·세종·제주 등) 대상 시범 운영 돌입,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·사무 확대

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용

- **신속한 지방재정 집행***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마련
 - 집행 부진 해소를 위한 제도 및 평가체계 개선, **재정인센티브**** 강화
 - * 신속집행 관리 대상액 228조원의 60%(137조원) 집행을 상반기 목표로 설정
 - **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·불용액 반영, 법률상 특별회계 존치 여부·집행가능 범위 등 검토
 - 지역상생발전기금 용도 개편·성과관리 강화로 지역활력을 위한 역할 확대
- **지방세 지출과 지방공공기관의 경기부양 역할 확대**
 - 저출산·지방소멸 대응 및 **지역경제 활성화**를 위한 지방재정·세제 지원 강화
 - **지방공공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대상 합리화** 등으로 **지역 공공투자 확대** 유도
- **지역사랑상품권 3조원*** 발행과 지역기업 수주 활성화, 내 고향에 기부하고 공제받는 **고향사랑기부제** 도입으로 **지역·골목경제 활성화**
 - * **발행규모 확대**(^{'19년} 2.3조원 → ^{'20년} 3조원), 모바일상품권 확산, 부정유통 방지
- 지방의 **자율성·책임성 강화**,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**2단계 재정분권*** 추진
 - * 정부기능의 자치단체 이양과 함께 지방세 확충방안 마련,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 검토

□ 상생과 협력의 지방자치 실현

○ 중앙과 지방 간 정책적 소통 노력 강화

- 대통령·시·도지사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추진 및 다양한 사회이슈에 대한 중앙-지방 공론장인 지역상생 정책포럼 출범*

* 부처 세종이전에 따른 정부정책의 현장감 저하 및 중앙·지방 간 소통단절 해소 목적

○ 지자체 간 복지·환경 등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*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, 협약,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지역간 협력 활성화 추진

○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관할구역 경계조정* 지원 강화

* 관계 지자체 간 자율적인 합의·조정 절차 및 중앙분쟁조정위에 경계조정 권한 부여 도입 추진

○ 국민 최접점인 지방행정에서의 적극행정 문화* 정착·확산

*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,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

③ 국민과 함께하고 신뢰받는 정부

◇ 정부혁신 핵심과제인 '공공서비스 혁신', '참여·협력'의 질적 제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고, 디지털 전환(Digital Transformation)에 부응하는 정부의 대응 역량 제고

(1) 디지털기반의 유능한 정부 구현

□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형 정부혁신 추진

- 참여와 협력,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4대 역점분야 선정 및 추진

< 4대 역점분야 >

- ① (참여)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
- ② (협력)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
- ③ (서비스)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
- ④ (일하는 방식)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

□ 사람이 먼저인 대민 디지털서비스 혁신

- 임신·아이돌봄 등 생애주기상 주요 이벤트와 관련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는 **원스톱 패키지 확대**(^{'20년} 2종*, ^{~'22년} 10종 이상)

* **(맘편한 임신)** 엽산제·철분제, 진료비지원,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지원서비스 14종 연계
(온종일 돌봄) 다함께돌봄, 지역아동센터,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 후 초등돌봄 4종 연계

-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공공보조금(현금·현물)을 한 곳에서 확인·신청하는 **정부 보조금 맞춤형 안내서비스** 제공

* ^{'20년} 국가보조금 사업 → ^{~'22년} 지자체 자체사업 및 공공기관·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

- **모바일 기반의 국민편의서비스 확대**(“Mobile First”)

-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·보관하고, 관공서·은행 등에 방문 없이 전송하는 **전자증명서 확대**

* **현재** 주민등록등초본, 지방세납세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3종
 → ^{'20년말} 국세납세증명 등 100종 → ^{'21년} 300종까지 확대



- 온라인으로 고지·안내받고, 간편하게 납부하는 **디지털 고지·수납 활성화**

- 주민등록번호 중 지역번호*를 폐지하고 **임의번호** 부여(^{'20.10월}~)

* 성별 뒤 여섯자리,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대해서만 적용

□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 대폭 확대

- 국민이 느끼는 우선 현안에 대해, 국민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화까지 지원하는 **‘도전. 한국’ 사업 추진**

* 과감한 포상과 후속지원, 신속한 정책환류로 참여 효능감 제고

• 시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한국형 플랫폼 운영



- **‘광화문1번가’**를 통한 각종 온라인 제안창구의 접근성을 제고하고, 정책공론 및 정책화 기능 확대

- 제안 숙성 강화 및 참여예산제와의 연계로 정책반영률 및 효능감 제고

- 정책제안, 정부평가, 국민포상 등에 국민 추천·심사 등 **참여비중 확대**

□ 차세대 지능형 전자정부 기틀 마련

- 디지털 전환(Digital Transformation) 시대 도래로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 표출, 낡은 체제 극복 계기 마련을 위한 중장기 관점의 로드맵 수립(~'20년)
- AI기반, 세계 1위 전자정부로의 제도약을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마련
 - 「전자정부 2025 기본계획」 마련, 디지털 행정혁신 촉진 및 지능형 서비스 확산 근거 마련 등 「전자정부법」 개정 추진
 -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대와 민간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등 기술 진보에 부응하는 전자정부 추진방식 혁신
- 차세대 지방재정·세제시스템 구축으로 서비스 품질 혁신(~'22년)
 - 보조금 부정·이중수급 방지(재정시스템), 지능형 탈세대응기반 마련, 실시간 세수분석을 통한 자치단체 의사결정 지원(세제시스템) 등 추진

□ 국민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편리한 공공웹사이트 환경 구현

- 공공웹사이트 플러그인 완전제거*와 정부 사이트 內 간편한 본인 인증수단인 디지털원패스** 지속 확대(~'22년)
 - * '20년까지 2,728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(대체기술이 없는 일부 웹사이트 제외)
 - ** 모바일 인증(지문안면패턴 등)으로 공공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한 간편 로그인 시스템
- 인터넷 공문서 제출창구 「문서24」를 통해 '공공웹서식'을 확대 보급하고, 어떤 SW로도 접근가능한 개방형 문서표준(ODF) 공공서식 도입
- 민원신청 등 정부서비스를 친숙한 웹사이트·앱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Open API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방 추진

[2] 데이터경제 활성화

□ 안전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편

-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출범 지원 등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개편
 - 가명정보 활용 등을 담은 개정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하위법령 신속 정비

- EU GDPR 적정성 결정 등 급변하는 국제 개인정보 보호 환경 적시 대응
 - 우리 기업·국민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대응 및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**데이터 이동권***의 산업분야별 적용가능성 검토
 - * 정보주체가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이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□ 개방형 데이터·서비스 생태계 구축

-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원칙(국가안보·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 제외)하에 기업·국민이 필요로 하는 신산업·사회현안 데이터*를 대폭 개방
 - 국가데이터맵과 Open API 확대로 공공데이터 활용 편의성 향상 및 융·복합 촉진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등 범국가적 품질관리 체계 구축
 - * 6대 핵심 영역 : 신산업(자율주행, 스마트시티, 헬스케어, 금융정보) / 국민생활(생활환경, 재난안전)
- 성장단계별(스타트업-도약-성숙) 데이터 기업 지원 및 데이터 구축·가공 기업으로의 지원 확대를 통한 데이터 강소기업 육성*
 - 정부 내 데이터 분석·활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마련
 - *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,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, 오픈스퀘어D 지원 확대 등
- 국민이 자기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다운로드*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 및 자기정보 활용권 확대**
 - * (현행) 증명서 제출 ⇒ (향후)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·다운로드·제공
 - ** 보유기관 동의가 없어도 본인정보를 다른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[3] 정부운영의 생산성 혁신

□ 정부조직관리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

- 긴급대응반*·벤처형조직** 활용 확대, 행안부 사전협의 범위 축소***로 부처의 현안대응 능력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 제고
 - *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 대응조직 ** 드론·빅데이터 등 도전과제 추진 조직
 - *** 실국단위 기능변동, 기구·인력 증가 시에만 협의(정책관 이하 하부 기능·명칭은 부처 자율관리)
- 생활밀착형 협업 과제* 중점 발굴 및 기관 간 협업모델 확대
 - * (예시: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) 중소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세탁여건 개선을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(고용부·산단공·안전보건공단 협업)

- 경찰·소방 등 **현장민생공무원** 충원을 지속하되, **본부 정책부서**에 대해서는 **인력 재배치***를 **상시화**하여 조직·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
 - *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(매년 1% 이상)을 신규·현장수요 등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

□ 현장중심 행정을 지원하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

- 현장점검·조사, 복지활동 등 **현장행정**을 위한 **사무환경 개선** 세종 이전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**모바일 행정 고도화** 등 **업무환경 혁신**
 - 출장·이동 중에도 업무가 가능한 G드라이브와 웹오피스 활용을 확대하고, 클라우드를 활용해 1인 2PC → 1노트북 체제*로 전환
 - * '20년 행안부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전 부처 확산
- AI를 활용한 **업무 자동화(RPA)***로 업무효율과 생산성 향상 도모
 - * **Robotic Process Automation** : 단순·반복업무를 AI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속처리
- 안전성·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의 **디지털 신분증*** 도입
 - * 이용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공무원증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 확대

□ 국민중심의 정부운영 지원 기능 강화

- 범정부적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과 엄정한 법정선거사무 수행으로 **깨끗하고 공정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***
 - * 공직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, 복무기강해이·소극행정 행태 단속
- 전세계 협력요청이 쇄도하는 한국 행정 및 전자정부의 **글로벌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한국형 전자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 지원***
 - *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**전자정부협력센터**(20년 신규 4개→8개) 및 **신남방·신북방 교류협력 확대** (20년 우즈베크정부 파견), **전자정부 ODA 사업 확대 추진**, 공공행정 우수사례 개도국 공유 등

- 안전한 **정부세종 신청사*** 건립(~22년)으로 세종시대 완성
 - * 연면적 13만㎡, 지하 3층·지상 15층 규모



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

- ◇ 형사소송법 개정(20.2.)에 따른 수사권 개혁 완수 및 수사 책임성 제고
- ◇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권한 분산 및 민주적 통제 기반을 확충하고 경찰행정 전반에 인권시스템 확고히 정착

□ 형소법 개정 후속조치 및 경찰수사 책임성 제고

- 대통령직속 ‘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’과 협의하여 수사권 개혁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수사준칙(대통령령) 제정 및 수사권 개혁 관련 연계법률 개정 추진
 - 하위규칙 및 매뉴얼 정비, 교육훈련 등으로 신속한 현장 정착 유도
- 수사 쏠 과정에 걸친 실효적 통제 및 국민 참여·감시 확대
 - 메모권 보장·진술녹음제 도입 등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,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권* 실질화
 - *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통지 확대, 본인 진술조서 열람·복사 신청시 신속제공 등
 - 수사 절차 관련 행정과 심사를 전담하는 사건관리과 설치 및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영장심사관·수사심사관·책임수사지도관* 도입
 - *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관 중 선발, 독립적·객관적 지위에서 사건 모니터링
 - 수사배심제 개념을 도입, 시민의 관점에서 부실수사·수사권 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운영
- 수사 역량 함양을 통한 경찰 수사의 전문성·균질성 확보
 - 지방청 內 전문 수사파트(사이버, 과학수사 등) 확대, 지능범죄·광역 수사대 확대, 법과학감정실 설치 등 통해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확립
 - 법률·회계·의료 등 수사 전문인력을 선발·양성하고 통솔범위 조정(소팀제), 서면지휘 활성화 등 수사지휘 책임을 강화
 - 지방청 직접수사부서 ‘선발 종합평가제’를 도입, 경력·자격·인성 등이 검증된 수사관 선발·배치 및 개인별(신임전문·지휘) 맞춤형 전문화 교육 실시

□ 경찰 권한 분산 및 민주적 통제 기반 확충

-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의 권한·사무·인력을 배분하고, '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' 신설로 경찰수사의 중립성·독립성·전문성 제고
 - * 개별 사건에 대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 원칙적 폐지
-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경찰청에 대한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고, 국가인권위원회·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권 남용에 대한 감시 확대
 -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상주하는 현장인권상담센터 활성화
 - *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상담 외에도 유치인 입감 전 면담 등 인권침해 감시
- 경찰 정보활동 근거와 활동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,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 명문화 등 경찰관직무집행법·경찰공무원법 개정 추진
 - 동법 시행령·경찰청 직제 등 개정을 통해 정보경찰 개혁 법제화
-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(21세 미만→42세 미만)·편입학 제도 도입 등 문호를 개방*하고, 軍 전환복무 제도·학비 면제 등 특혜 폐지
 - * '20년 모집'21학년도 입학생부터 △신입생 선발인원 축소(100명→50명) △입학연령 제한 완화 △남녀 통합선발 / 편입학은 '22년 모집'23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

□ 경찰활동 전반에 체계적인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

- 개방직 인권정책관 신설, 경찰업무 전반을 인권적 관점에서 총괄
 -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된 인권영향평가를 집회·시위분야까지 확대하고 '경찰관 인권행동강령'을 제정하여 인권중심 치안행정 정착
- 유치장 - 직접수사부서 분리, 수사부서의 조사·사무공간 분리, 영상 녹화실 확대 등 수사상 인권보호 환경 조성
- 대화경찰 및 현장안전진단팀 역량 강화를 통해 소통 위주의 집회·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 참가자·국민·경찰의 안전 확보
- 경찰 직장협의회 출범('20.6월~), 경찰 내 민주적 의사소통구조 정착

IV. 2020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



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

- 5만명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지역별 소방서비스의 격차는 낮아지고 대형재난 대응역량은 강화



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

-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1,500대 우선 설치
-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장비 설치 완료



‘가명정보’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

-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통계작성·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폭넓게 활용



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

- 주민등록 부여체계가 45년만에 개편되어 뒷자리에 지역번호가 사라지고, 성별 뒤 여섯자리에 임의번호 부여



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확대

- 임신, 아동돌봄, 전입신고 등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확대
- 받을 수 있는 정부보조금도 「정부24」에서 일괄 확인·신청 가능



전자증명서 발급·제출

- 주민등록등초본,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고, 공공·금융기관에 제출



‘도전 한국’ 플랫폼 개시

- 국민이 느끼는 우선 현안에 대해, 국민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화까지 지원하는 ‘도전. 한국’

| 국정과제 (또는 핵심정책) | 추진현황 | 향후계획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<p>③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주4·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(6차)에 따른 심의·결정 추진(~'19.12월) * 접수(21,392명), 심의·결정(13,637명, 63.7%) ○ 「과거사정리법」 개정안(대안)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및 법사위 회부('19.10월) ○ 옛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, 민주인권기념관^(가칭) 기본·실시설계 착수('19.12월) ○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확대 - 일본 지역(74위/'19년), 사할린 지역(42위/'17~'19년) 유해 송환·안치 - 타라와 지역 「한·미 업무협약」 체결('19.8월) ○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총사업비 조정(295억→402억), 유해매장 추정지 우선 매입('19.12월) ○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(10.16.) 지정 및 제40주년 기념식 개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주4·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(6차)에 따른 심의·결정 완료('20.상) ○ 「과거사정리법」 개정 추진(법사위 및 본회의 대응) ○ 민주인권기념관^(가칭) 설계 완료, 공사 추진('20.하) ○ 태평양 지역^{타라와}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추진('20.상) ○ 전국단위 위령시설 건축 설계공모, 유해발굴('20.하) ○ 5·18민주화운동 등 국가 폭력 피해자 대상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('20.1월~광주·제주) ○ 5·18 40주년 사업 지원 |
| <p>⑤ 365일 국민과 소통 하는 광화문 대통령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^(가칭) 자문위원(유홍준 前 문화재청장) 브리핑('19.1월) *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마무리 이후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 ○ 부·처·청 및 광역지자체장 일정 통합 공개 확대('19.12월) * (기존) 각 부 장관 등 28명 → (확대) 17개 청 및 17개 시·도 기관장 일정 추가 공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 상황에 맞춰 이전계획 수립 ○ '주요인사 일정공개 운영 지침' 수립 |
| <p>⑥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인정보 침해없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데이터3법* 개정 *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('20.1.9) ○ 한-EU 간 회의 등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GDPR 적정성 초기 결정 가시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(하위법령 개정 등) 추진(법 공포후 6개월) ○ 한-EU 적정성 결정 협의 지속 추진 |

| 국정과제 (또는 핵심정책) | 추진현황 | 향후계획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<p>⑥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* 및 시민 사회발전기본법 제정** 추진 * 이명수('16.10월) 의원안 등 상임위 계류중 ** 권미혁('19.1월) 의원안 등 상임위 계류중 ○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추진 ○ 1365자원봉사포털 개선('19.7.10.~12.31.) 및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ISP연구 용역 추진(~'19.4.8.~7.6.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조속한 법률 제·개정을 위해 국회 협의 등 지속 실시 - 현재 법체계 내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 발굴 추진 ○ 1365자원봉사포털 사용 편의 지원 등 기능 개선,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자원봉사 및 기부 활성화 지속 추진 |
| <p>⑧ 열린 혁신 정부, 서비스 하는 행정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기록물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공공기록물법 개정·공포('19.12월) ○ 각급기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완료('19.12월) ○ 열린소통포럼(11회) 개최('19년), 국민 참여플랫폼 기능 개선 ○ 6개 지역혁신포럼 추진위 구성 및 31개 협업의제 실행 종료('19.7~11월) ○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4개소 선정 및 조성('18~'19년) ○ 「공공자원 개방·공유 관리시스템», 「전자증명서 발급·유통시스템」 구축('19.12월) ○ 국가데이터맵('19.4월) 및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확대 구축 추진 ○ 범정부 중장기 개방계획('19.2월)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 지속 확대 ○ 지능형 정부 로드맵,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 등을 마련하여 차세대 지능형 정부를 선도 ○ 공공웹사이트 내 플러그인 제거 * 70.8% 제거 완료(2,728개 웹사이트 중 1,931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기록물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추진 ○ 국가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('20.12월) ○ 다양한 참여기제를 연계한 열린소통포럼 활성화(계속) ○ 지역혁신포럼 신규 지역2개 내외 선정1월, 협업의제 실행~11월 ○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신규 1개소 추가 조성 ○ 전자증명서 발급·유통 서비스 확대(계속) ○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확대 (지자체·공공) 구축('20.3월) ○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확대 (신산업·자율주행 등 19개 분야) ○ 디지털 정부혁신 중장기 로드맵 마련('20년) ○ 공공웹사이트 내 플러그인 완전 제거('20년) |
| <p>⑬ 국민의,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·검 수사권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「형사소송법」·「검찰청법」 개정('20.2월) - 차장 주관 '책임수사 추진본부' 설치('20.1월), △법령정비 △제도개편 등 경찰수사의 책임·전문성 강화 정책 총괄 ※ 자기번호노트·영장심사관 확대시행 등 현장 수사제도 개선 노력 지속추진 - '경찰수사 개혁(Re:Design)' 추진, 책임수사를 위한 내·외부 통제장치 마련 ※ △(내부) 사건 무작위배당 등 배당체계 개선 △(외부)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신설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올해를 '책임수사 원년'으로 정하고, 수사권조정 후속추진단과 협력하여 차질없이 조치사항 이행 - △국가수사본부 설치 △일반경찰의 수사권여 통제 등 경찰수사의 공정·중립성 제고 |

| 국정과제 (또는 핵심정책) | 추진현황 | 향후계획 |
|--|---|---|
| <p>13 국민의,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「경찰법」·「경찰공무원법」 등 개정안 발의('19.3월) - 제주자치경찰 시범운영 확대(3단계) ○ 경찰개혁 완수에 정책 역량 집중 ※ 총 330건 세부과제 중 81%(268)건 완료 - 정보활동범위를 규정한 「정보경찰 활동규칙」 제정 - 경찰대생 특혜*폐지 등을 담은 경찰대학 개혁방안 발표 * 입학 상한연령 완화, 학비·병역 면제 폐지, 신입 선발인원 축소, 여성 선발한도 폐지 등 - 「공무원직장협의회법」 개정('19. 12월), 경찰관 노동기본권 보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경찰 관련 「경찰법」 등 법률 개정 노력 지속 - 법률개정 이후 서울·세종 등 5개ha 시·도 시범 실시 ○ 경찰개혁 미완수 과제 속도감 있게 달성 - 개혁법안 조기 입법으로 제도·법제화에 총력 - 개혁과제 모니터링 및 현장 안착 지속 점검 |
| <p>14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신설('19.4월) - 범죄취약지역 1,884개소에 CCTV·비상벨 등 방범시설 11,617개 설치 -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을 신청받아 29만 개소 탄력순찰 ○ 여성안전기획관 신설, 여성 대상 범죄 대응 체계 구축('19.5월) - △불법촬영 범죄 △웹하드 카르텔 △악물 사용 성폭력 사범 연중 집중 단속 ※ △불법촬영 5,560명 △웹하드 운영자 72명 · 업로드 557명 △마약류사범 10,411명 검거 - 가정폭력·아동학대 등 엄정대응, 검거건수 각 19%·22% 증가 ○ 지문·DNA 분석 등 감식 역량을 고도화 하고, 미세사건 전담수사팀 확대 운영으로 화성연쇄살인사건 해결 등 성과 ○ 경찰인력 2만명 증원 목표로 '19년 현재 8,509명('19년 4,582명) 증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주민·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체계 구축 ○ '여성안전 사회안전망' 위한 대외 협업·연계 체계 마련 ○ 현장 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위한 치안R&D 계속 - 「치안신업진흥법」 등 입법 지연 중인 법안 관련 국회 대응 ○ 법과학감정실 총 7개소 신설 추진('20년 2개소) ○ 의경대체·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인력 증원 지속 |
| <p>66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의무화, 초등학교 보도·보행로 892개소 설치 ○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 및 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1,020개소 실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※ 무인교통단속장비 1,500대, 신호등 2,200개 설치 |

| 국정과제 (또는 핵심정책) | 추진현황 | 향후계획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점검결과 공개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반시설,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 16만 1,588개소 집중 점검 ※ 점검결과 공개율: ('18년) 77.3%→('19년) 92.1%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(잠정연기) ※ 최근 사고발생 및 국민관심 분야 위주로 선정 |
| ㉕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합건물, 위험물시설, 근린생활시설 등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1단계('18.7~12월): 17만 2천개동 2단계('19년): 38만 2천개동 ○ 생활 밀접 5대 체험* 중심의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완강기, 전기·가스, 승강기, 심폐소생술, 소화기 ※ 참여인원: 노인·장애인·다문화 89,090명, 어린이·교사·학부모 등 63,720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및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 추진('20년) ○ '20년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및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추진 |
| ㉖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와대·중대본·관련 부처의 지휘·조정·통제 관계에 관한 역할 재정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 전면 개정('19.12월) ○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확대('17년 2회, '18년 이후 4회),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○ 안전한국훈련 민간 참여 및 어린이 재난안전 훈련 학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한국: ('18년) 1,013개, ('19년) 1,166개 - 어린이: ('18년) 34개, ('19년) 46개 ○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단계 준공('19.9.), 2단계 착수('19.11.) * 통합대응체계 지원, 구축·운영예산 최소화 ○ 재난문자 용량을 확대(60자 → 90자, '19.4.) 하여 국민행동요령을 포함해 전달 ○ 사도 소방력 보강 및 소방문서 신설('19년 19개소) ○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6개 법률 제·개정안 본회의 통과(11.19.) ○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개정·공포(12.10.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기관리 매뉴얼 미비점 검토 등을 통해 지속 보완 ○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실시(4회) 및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(계속) ○ 안전한국훈련 및 어린이 재난안전 훈련 확대 지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한국: ('20년) 1,210개 - 어린이: ('20년) 90개 ○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단계 추진(~'20.8.) 및 3단계 착수('20년~) ○ 5G시대 대비, 긴급재난문자 용량확대 추진(90자 → 157자) ○ 소방문서 신설 지속('20년 18개소) ○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하위법령 개정('20.4월) ○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설계('20~'21년), 착공('21년), 준공('23년) |

| 국정과제 (또는 핵심정책) | 추진현황 | 향후계획 |
|---|--|--|
| <p>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('19.12.26.) ○ 지방자치법 전부개정*, 주민참여3법(주민소환법·주민투표법·주민조례발안법) 제·개정 추진(상임위 계류), 전략적 홍보·토론회 개최 등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실질화 추진동력 확보 * 획기적 주민주권 구현, 실질적 자치권 확대 등 ○ 국가기능의 획기적 이양을 위한 지방 이양일괄법 공포(20.2.18) ○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·운영('19.7.1.) ○ 지자체 기구설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('19.4월) ○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('18년 47개 → '19년 408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민참여3법 등 국회 통과 주력 및 하위 법령 정비 추진 ○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,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새로운 의회제도 정착 지원 ○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준비, 이양에 따른 지자체 행·재정 지원 제도화 ○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 ('20년 600개) 및 고도화 추진 ○ 지자체 간 협업확대를 위한 협약제도 도입 방안 마련 |
| <p>㉕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단계 재정분권 완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소비세 10%p 인상, 8.5조원 확충 - 국고보조사업(3.6조원)의 지방 일반사업 전환, 재정 균형장치 마련(상생기금 출연 등) ○ 「지방교부세법」 개정으로 소방안전 교부세율 25%p 인상 완료('19.11월) ○ 지방세 지출 합리적 재설계로 '19년 지방세 감면율 13.2% 달성 ○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, 고액·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- '19년 예산낭비신고 575건 접수·처리 ○ 참여에 의한 예산제도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참여예산, 국민참여예산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단계 재정분권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범정부TF 논의를 통해 최종안 마련(~'20년) ○ 「고향사랑 기부금법」 제정 추진 ○ 지방세 비과세·감면율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20년 일몰예정인 지방세 감면 검토 등 ○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여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(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개정) |
| <p>㉖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</p> <p>㉗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복도시법 개정('17년) ○ 중앙행정기관(행안부, 과기정통부) 이전 계획 변경 고시('18년) 및 세종시 이전 완료('19년) ○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 완료 및 공사 발주('19년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 ('20년~'22년) |